

2018 서울에너지자립마을 포럼

100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이후, 에너지자립마을 2.0

프로그램 안내

사회 김연지

14:00-14:20	'20	개회사 황보연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축사 유정희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윤순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14:20-15:20	'60	발표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과와 과제 김연지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혁신을 혁신한다 유창복 성공회대 사회경제대학원 교수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구상 제안 이유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간사
15:20-15:30	'10	휴식
15:30-16:30	'60	지정토론 좌장 김동환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고대그린스쿨대학원장 임정빈 동작신협 이사장 오회옥 금하에너지자립마을 대표 이강호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 정혜영 도시와삶 사무처장
16:30-17:30	'60	종합토론 청중 질의 및 응답

목 차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과와 과제	1
---	---------------------	---

김연지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2	혁신을 혁신한다	21
---	----------	----

유창복 성공회대 사회경제대학원 교수

3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구상 제안	45
---	-----------------------	----

이유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간사

4	지정토론	57
---	------	----

임정빈 동작신협 이사장
오회옥 금하에너지자립마을 대표
이강호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
정혜영 도시와삶 사무처장

발표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과와 과제

김연지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의 추진현황과 성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목 차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개요

2 그간 주요성과

3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4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의 현주소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개요

서울, 에너지소비에서 에너지자립으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2022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개요

서울, 에너지소비에서 에너지자립으로




노원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 조성기간 : 2013.10~2018.4
- 5대 에너지(난방, 냉방, 온수, 환기, 조명) 소요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에너지플러스 주택단지
- 규 모 : 지하2층/지상7층, 121호
- 사업비 : 총 490.2억원 투입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개요

 서울, 에너지소비에서 에너지자립으로



▪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 시티

- 5S 모델 구축
- 2022년 전력자립률 30% 달성
- 미세먼지 연간 190톤 감축
- 온실가스 연간 18만톤 감축
- 사업비 : 105억원(정부+민자, 실증과제)
 '19년 시비 : 5.1억원
- 서울에너지공사 총괄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개요

 서울, 에너지소비에서 에너지자립으로



VS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개요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정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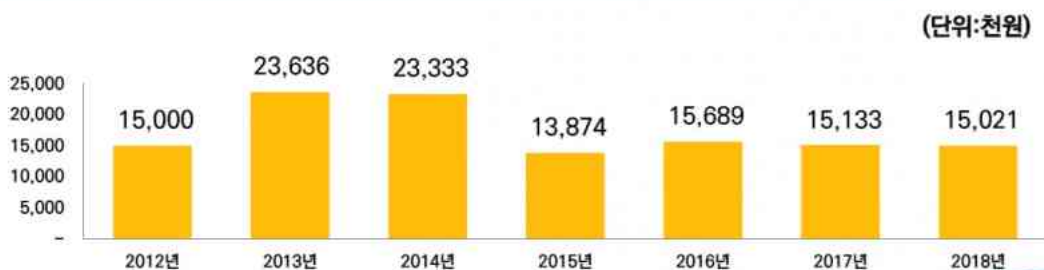
3 (주민셋이 모여) ▪ **3** (삼년 동안) ▪ **3** (절약, 효율, 생산 세 가지 방법으로!)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개요

그간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예산 추이



그간 에너지자립마을 마을당 평균 지원금액 : 17,384천원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개요

그간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개소)	7	11	15	35	55	80	100
1~3년차	7	11	15	29	45	66	73
4~7년차	-	-	-	6	10	14	27
저층주거지형	5	7	8	16	15	33	38
아파트형	2	4	7	19	40	47	62

(단위:개소)



※ 2017년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8개소 조성

전력소비 평균 17.45%, 40,318kWh 절감('12년 대비 '16년 실적)

- 참여 연차가 높을수록 에너지 절감률 지속적으로 증가

100개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 설치로 연간 482만kWh 생산

- 4인 가족 기준(300kWh) 16,066가구의 월전기소비량 해당 (2018.8 마을별 보고서 기준)

2. 그간 주요성과

주민3인에서 시작된 마을내 주민 및 에너지공동체의 성장

- 에너지 교육 및 견학을 통한 참여주민 에너지시민활동가로 성장
- 에너지사랑방 운영, 에너지축제 개최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에 기여



에너지교육(홍은극동)



에너지사랑방(난곡난향)



에너지축제(경동노들숲)



에너지컨설팅(수유1동)



우수마을 견학(선유푸르미)



미세먼지저감캠페인(신동아파밀리에)

2. 그간 주요성과

2012~2016년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분야 성과

절약 :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수

- 가입자수 약 33배 증가
- '12년 188명 ⇒ '16년 6,335명 (단위: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수	188	1,132	2,955	5,187	6,355
저층주거형	120	675	1,318	1,072	1,041
아파트형	68	457	1,637	4,115	5,314

효율 : 주택단열개선 시행 마을 수 2개('12년) ⇒ 12개('16년)

효율 : LED 조명교체(개)

- 조명 교체수 약 24배 증가
- '12년 443개 ⇒ '16년 10,793개 (단위: 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LED 조명 교체 현황	443	223	2,469	5,975	10,793
저층주거형	-	203	92	972	1,073
아파트형	443	20	2,377	5,003	9,720



11

2. 그간 주요성과

2012~2016년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생산 분야 성과

생산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1kW 미만) 설치가구수

- 설치가구수 4년 만에 721배 증가
- '12년 0개 ⇒ '13년 2개 ⇒ '16년 1,442개
- 아파트형 에너지자립마을 71% 차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
설치가구수	-	7	232	388	1,442	2,069
저층주거형	-	7	93	116	444	660
아파트형	-	-	139	272	998	1,528

생산 : 주택태양광(3kW 미만)설치가구수

- 설치가구수 약 3배 증가
- '12년 11개 ⇒ '16년 36개
- 저층주거지형 에너지자립마을 76% 차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
설치가구수	11	37	38	25	36	147
저층주거형	7	36	35	9	23	110
아파트형	4	1	3	16	13	37



12

2. 그간 주요성과

에너지 전환 스토리 발굴

창의적, 실용적 에너지절약법 3+1

**3+1 한번 설정으로
65일 절약하기!**

냉장고 설정 온도 변경하기
· 냉장실 설정 온도: 1~10℃
· 냉동실 설정 온도: 4~5℃

HDTV 절전 모드로 변경하기
· HDTV 절전 설정
· 절전 모드로 변경
· 절전 수준은 3단계 또는 4단계로 설정

에어컨 코드 뽑아내기
· 주말·이동해 4월까지
· 에어컨 전원 코드 뽑아내기
· 에어컨 전용 누전 차단기
· 내려놓기

더 더 부지런하다면
· 인다워 조명 전환 (과이어, 보통벽스) 전환 2가
· 외출하기 전 잠자기 전에 확인 요격

에너지절약으로 나눔, 상생 실천

- 에너지관리비 2억원 절감 → 경비 30명 고용 보장(임금 19%인상, 최저임금 100% 보장)

- 경비실 외벽, 소형 태양광 발전기 및 냉방시설 설치



아파트 경비원 상생모델로 확산

서울시의 경비실 태양광 무상지원 확대

-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이하) 단지 태양광 미니발전소(300w) 개소당 2기씩 지원

2. 그간 주요성과

에너지 전환 스토리 발굴

에너지체험 투어코스 발굴 및 운영

강남 에너지자립마을 여행 지도
· 강남구 에너지자립마을

송파 에너지자립마을 여행 지도
· 송파구 에너지자립마을

영성 에너지자립마을 여행 지도
· 영성구 에너지자립마을

성북 에너지자립마을 여행 지도
· 성북구 에너지자립마을

2. 그간 주요성과

마을 유형별 효과적 절감전략 도출 - 아파트형

- 12가지 절전포인트로 30% 공용전기 절감모델 발굴, 찾아가는 아파트 에너지보안관 운영

산업용		보안등		세대전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⑪	⑫
① 부스터 펌프	② LED	③ 밝기 조정	④ 미니 태양광	⑤ 전기절약 실천	⑥ LED	⑦ 밝기 조정	⑧ 회생 제동	⑨ LED	⑩ 밝기 조정	⑪ 옥상 태양광	⑫ 경비실 태양광

【 아파트 에너지보안관 】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및 에너지설계사 출신의 에너지 절약·생산의 현장 달인으로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공용전기·세대별 전기 절약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양성·위촉한 에너지 시민 강사



2. 그간 주요성과

마을 유형별 효과적 전략 도출 - 저층주거지형

- 주택유형별(4개) 맞춤형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주택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웹서비스 제공 예정('18년 12월)

70년대 양옥집

80-90년대초 다가구

90년대 다세대주택

2000년대초 다세대주택

건물 진단 요약

기밀성: 40% (40/100) | 단열성: 10% (10/100) | 방수성: 10% (10/100) | 구조성: 10% (10/100) | 내구성: 10% (10/100) | 안전성: 10% (10/100) | 친환경성: 10% (10/100) | 에너지효율성: 10% (10/100) | 실내환경: 10% (10/100) | 기타: 10% (10/100)

따뜻하고 시원한 에너지절감 우리집 리모델링 BEST 6

공공주택 지원 | 최근 1999년까지 순환경 기준서 적용(노후개방난방)

에너지효율성 1등급 | 에너지효율성 2등급 | 에너지효율성 3등급

100€ 7% | Energy to reduce | 100€ 7% | Energy to reduce

19% 200€ | Investition | 5% 70€ | Investition in Sanierung der Heizanlage

에너지효율성 1등급 | 에너지효율성 2등급 | 에너지효율성 3등급

에너지효율성 1등급 | 에너지효율성 2등급 | 에너지효율성 3등급

2. 그간 주요성과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플랫폼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

- 스마트계량기 (전기요금 실시간 확인 및 절감)
전국 최초 설치, 금호대우 에너지자립마을



아파트 태양광 대여사업 모델 창출

- 신정이편하우스1단지 (210kW) 등 9개 에너지 자립마을 아파트옥상태양광 대여 추진



17

2. 그간 주요성과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테스트 플랫폼

옥상거치형 미니태양광 DIY 활동

- 미니태양광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민이 옥상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260w) 키트 개발. 시제품 출시 (2017.7.1.) 판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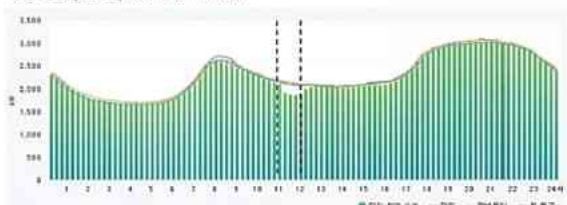


시민참여형 DR 시범 실시 (서울에너지공사 협력)

- 에너지자립마을 모의 국민DR, 아파트DR 실시를 통해 전력 피크시간 대에 전기를 아껴 기부하거나 아파트의 수익을 거두는 참여형 DR 시범실시



잠실트리저움 (3696세대) 2017.11.29. 11:00-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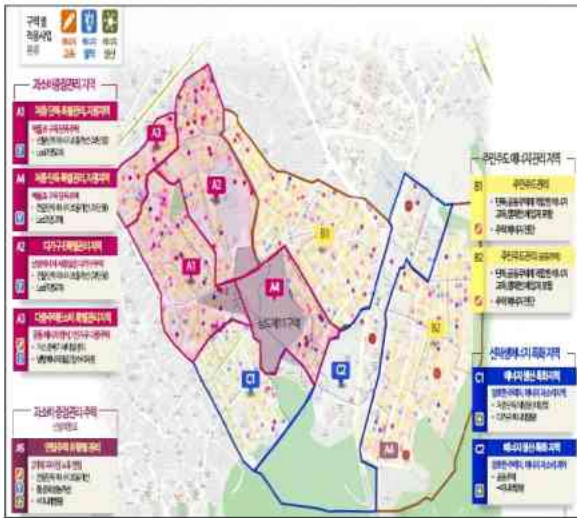


2. 그간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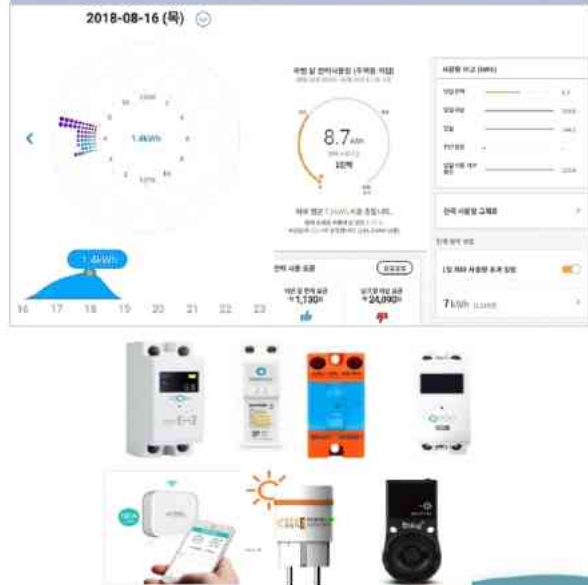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테스트 플랫폼

도시재생지 에너지실태 진단 및 사업발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 상도 4동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사업



2. 그간 주요성과

에너지경제 생태계 구축

에너지슈퍼마켓

마을닷살림협동조합(2013년) 설립·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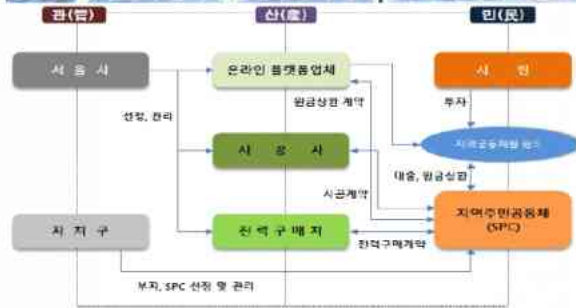
마을금융과 연계한 '우리집 솔라론' 출시



2. 그간 주요성과

에너지경제 생태계 구축

지역 공동체 펀드 추진



에너지서비스 일자리 플랫폼 실험

에너지절약, 생산제품 전시 홍보 및 에너지서비스 개발



NPO 지원센터 와트몰 전시(~'18.11월말)

21

2. 그간 주요성과

지역 에너지거버넌스 거점

❖ 서울시 자치구-주민간 에너지자립마을 협의체, 포럼, 워크숍 등 협치 추진



서대문구 에너지자립마을 협의체 포럼



관악구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협약식



구로구 에너지자립마을 2차 워크숍

22

2. 그간 주요성과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한 협치

❖ 부서간 협치 (기후환경본부 + 도시재생본부)

- (에너지시민협력과)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8개소 선정 지원('17)
-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에너지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6개소 선정 지원('18)

❖ 기관간 협치 (서울시 + 한국에너지공단 +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대외협력지원단 발족 ('17)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을 연계한 에너지 투어코스 홍보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18)
- 에너지자립마을 3개소 옥상태양광 3kW 설치 지원 (태양광 설비 기업, 공단) ('18)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대외협력지원단 발족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도시재생본부 소통간담회 대외협력지원단의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 후원 23

2. 그간 주요성과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한 협치

❖ 민민간 협치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결성)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타운홀 미팅 개최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창립
 - 100개 에너지자립마을의 자발적 네트워크 - 정보교류, 협력강화 목적('18.3.31)

❖ 마을활동-에너지신기술 정보교류 네트워크

- 민관산학연이 함께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 분기별 개최('17)
 -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마을, 연구원, 행정간 정보교류 활성화



100개 에너지자립마을 타운홀 미팅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창립 총회



제2회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

2. 그간 주요성과

언론을 통해 본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KBS) 태양광발전·LED 조명... 에너지자립마을 누진제 걱정 없어요



(MBC) 전기료 폭탄에 다시 주목받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



(JTBC) 태양광·LED로 전기료 줄인다... 에너지자립마을 눈길



(MBN) 여름철 전기료 폭탄?... 우리 마을은 걱정 없어요

3.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저층주거지형 에너지자립마을

십자성 에너지자립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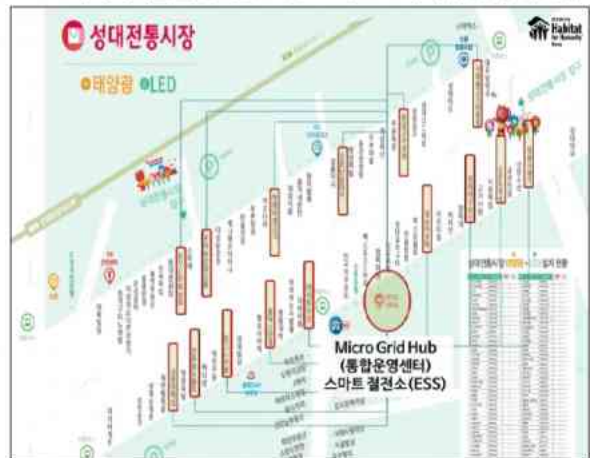
- 50가구 중 45가구 3kW 주택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 70~80% 절감
 - 설치 전 전기요금 5~6만원에서 0원 달성



※ 국가유공자 기본요금 1천원 할인 포함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 에너지진단 800가구, 마을투어 방문객 1천명(17년)
- 3개의 협동조합 설립
- 에너지자립전통시장 조성 스마트그리드(태양광·에너지)



3.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저층주거지형 에너지자립마을

산골 에너지자립마을

- 민관협력 기부 통한 노후 거주지 에너지 복지 향상



성미산 에너지자립마을

- 에너지자립마을 추진 후, 마을회관을 에너지 전환센터로 운영



3.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저층주거지형 에너지자립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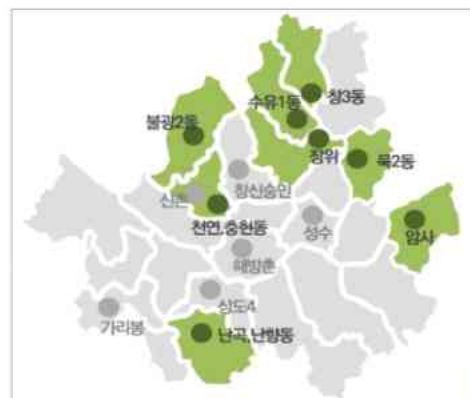
호박골 에너지자립마을

- 500가구 옥상 미니태양광 설치
- 에누리기업의 에너지복지
 - 공부방(1개), 자치회관(1개) 그린리모델링 및 옥상태양광 설치, 마을놀이터 태양광 지붕 설치, 골목길 태양광 문주등(호박모양) 설치 등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8개소

- 수유 등 에너지관련 주민분과 조직
- 난곡난향, 장위, 암사 등 에너지관련 자발적 주민모임 결성 및 지역 내 활동지속
- 상도4동, 신촌은 지원 종료된 에너지자립마을로서 도시재생지역내 자발적 에너지전환 활동 추진 중



3.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아파트형 에너지자립마을

현대푸르미 에너지자립마을

- 제1호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마을
- '13년 대비 '16년 공용전기 사용량 51% 절감



홍릉동부 에너지자립마을

- 371세대 중 360세대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 '16년 대비 '17년 세대별 전기요금 3,600만원 절감



3.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아파트형 에너지자립마을

성내코오롱 에너지자립마을

- 에코마일리지 100% 가입, 미니태양광 41% 설치, 스마트미터기 48% 설치 등
- '10년 대비 '15년 전기요금 20.4% 절감 (1,680만원 절약)



석관두산 에너지자립마을

- '10년 대비 '17년 세대전기 사용량 14% 절감
- '10년 대비 '17년 공용전기 사용량 40% 절감
- '10년 ~ '16년 세대 및 공용전기 절감으로 관리비 약 5억2천만원 절감

구분	세대 전기사용량 (kWh/세대)	공용 전기 사용량(kWh/세대)				전기사용량 합계 (kWh/세대)	전기료(원/m ²)	
		가로동 가로동	산업용 (급수펌프 등)	공용 기타 (지하 주차장 등)	엘리 베이터		공용	합계
석관두산B (2010년)	316	2.3	25	68	20	432	138원	709원
석관두산A (2017년)	271	0.7	17.4	35	16	340	8원	487원
절감률(%)	14%	70%	30%	49%	20%	21%	94%	31%

3.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아파트 공동전기 '0'원 에너지자립마을

신일해피트리 에너지자립마을

- 2015년 옥상태양광 20.16kWh
- 2016년 방음벽태양광 34.02kWh 설치 이후
- 2016년 8월 공동전기요금 '0원' 달성



사당우성 에너지자립마을

- 공용부분 LED 등 100% 교체, 전기요금 단일계약으로 변경
-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235kW 옥상태양광 설치로 (18년 7월) 공동전기요금 '0원' 달성

[206 동 807 호] 2018년 8월분 관리비 부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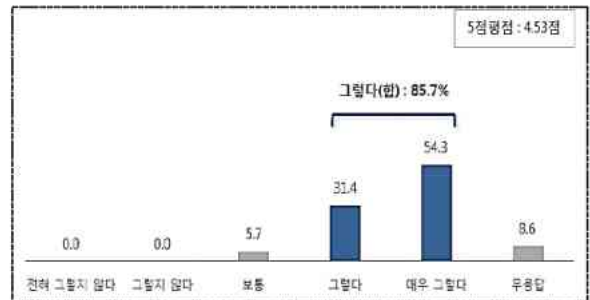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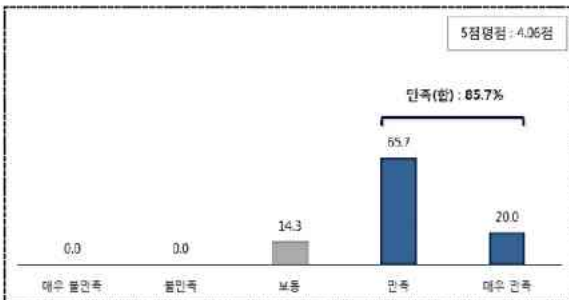
항목	전월고지금액	당월고지금액	증감액
일반관리비	50,200	42,800	-7,380
청소비	12,990	12,990	
소독비	850	850	
승강기유지비	1,280	1,280	
우선유지비	29,290	19,150	-9,140
장기유선충당금	31,540	31,540	
화재보험료	1,040	1,040	
경비비	43,400	43,490	-1,410
난방비	1,410		
위탁관리비	990	990	
정화조용역비	680	680	
세대전기료	12,440	21,800	9,360
공동전기료	1,100	0	-1,100
공기전기	3,900	3,700	-200
TV수신료	2,500	2,500	
물이용부담금	2,800	2,550	-340
상수도료	7,200	6,480	-720

31

4.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의 현주소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만족도 76.4점

- 2016년 서울시 감사담당관 설문조사 결과(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참여자 35명 대상)



기타제안 의견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충분한 사업 설명회 개최 및 관련 교육 실시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참가 설명 및 주민 설득이 필요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자립마을 방문 확대하여 격려 필요
-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확대

- 감사 강의료 등의 지원 확대
- 3년차가 종료되어도 지속적 지원 방안 마련
-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에 대해 언론 홍보 확대

32



발표 2

혁신을 혁신한다

유창복

성공회대 사회경제대학원 교수



혁신을 혁신한다

2018.10 / 짬가



1. 7년 혁신정책의 성과-I



주민의 등장과 연결

기대반
우려반

행정혁신과
시민사회혁신

주민의
등장과 연결
그리고 성장

점-선-면
15만 주민
5천여 주민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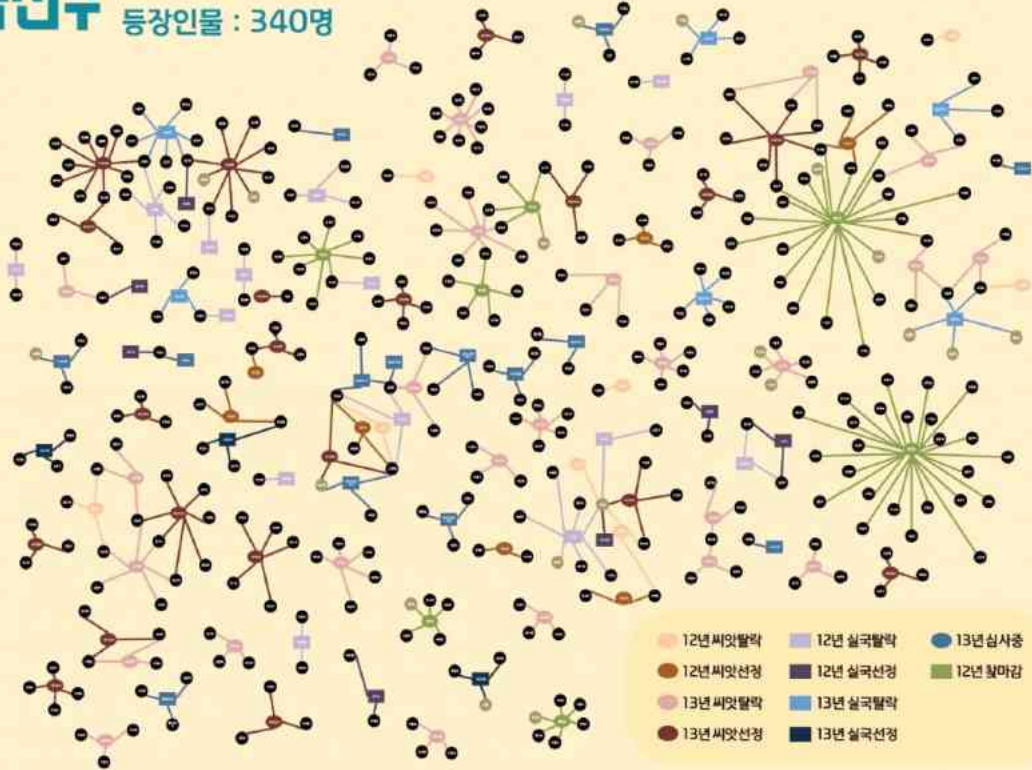


주민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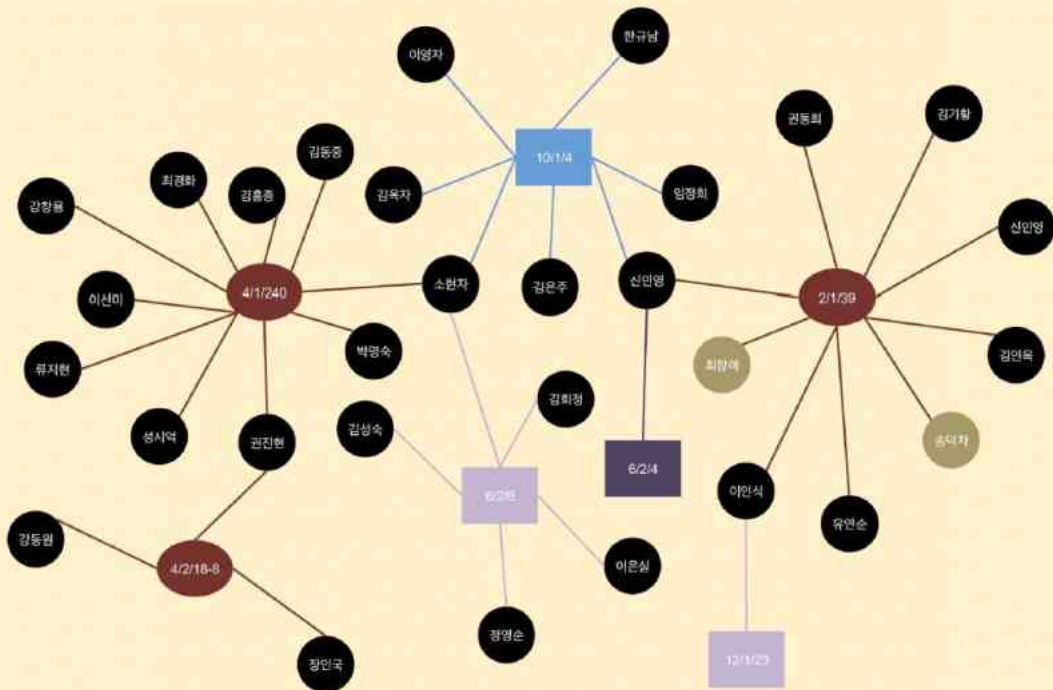


금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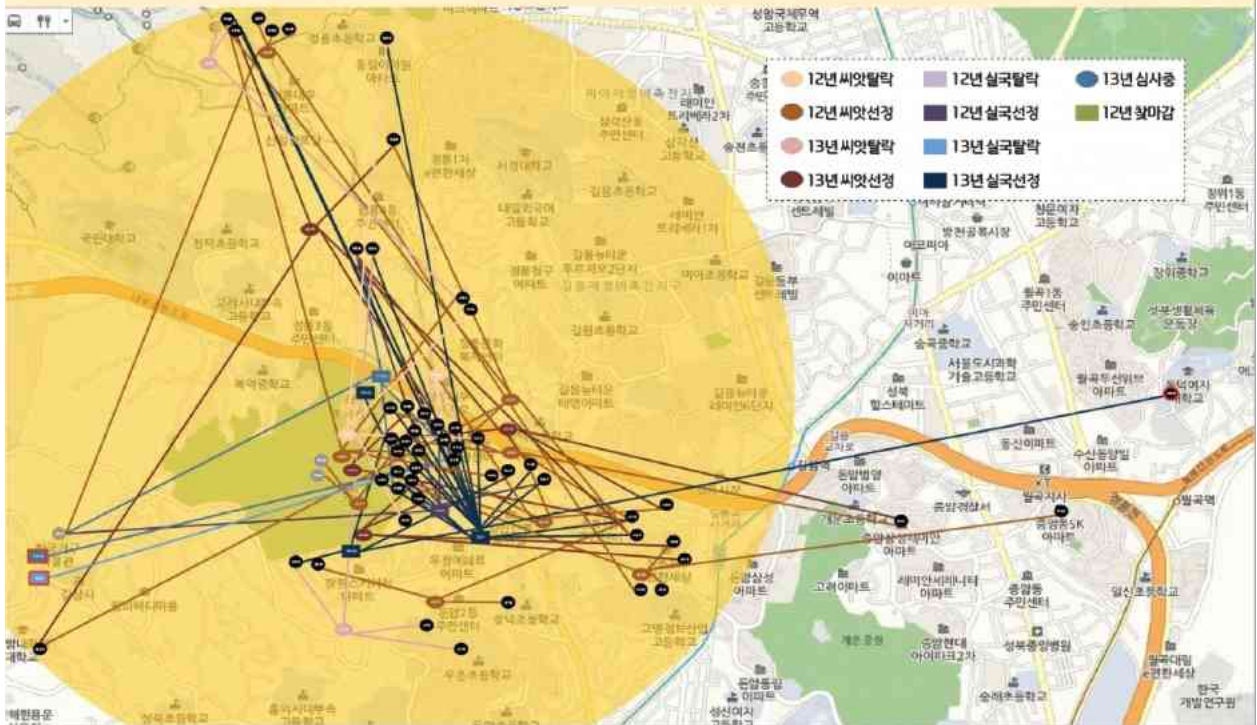
등장인물 : 340명



금천구 A그룹



성북구 정릉주변



서울은 연결되고 있다

ZZAGGA-PT-V2-08.jpg



2012년 : 1,189개 주민모임

~ 2017년 : 5,200개 주민모임



2. 7년 혁신정책의 성과 - II



찾동 [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



3. 권한의 민주화



대표성과 민주성





4. 권한의 실질화



정책결정권과 예산편성권

민주적 공론장 :
시민성, 관행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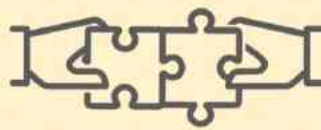
공론장의 숙의성 :
문제해결력

정보/자원 조달과 융합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우리사회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성'의 대중적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담대한 '정치 프로젝트'



5. 문제해결력



융합과 문제해결력

문제해결
설득력,
확장과 세력화,
지속가능성

융합과
칸막이

행정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공무원)도
그 자원을 전달하는
자(중간지원조직)도
칸막이를 허물 수는 없다

융합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문제해결
솔루션을 가진 자를
초대하면서 시작된다.

행정지원 > 문제현장



6. 생산과 재생산의 로컬생태계



로컬형 복지와 일자리

경제화 : 커뮤니티 기반의
생산과 재생산(일자리와 복지)
모델 구축 (Localizing)

관계와 돌봄
재생에너지



7. 행정의 역할 재구성



현장융합형 - 공론형

보조금정책
부서관막이형/공모형
▼
현장융합형/공론형

민주주의 위원회
|
주민자치회



8. 마을정부의 기초



동단위 [주민자치회] + [사회연대경제]



9. 마을정부의 거버넌스





10. Local Change (LC)

커뮤니티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로컬형
'복지-일자리' 모델의 구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자원이 융합되는 새로운 실천

행정주도형 칸막이를 뛰어넘는
현장 중심의 융합적 실천모델이
나와야 한다



11. Local Lab (LL)

리빙 랩(Living Lab)을 통한 민관협력의 혁신모델을 시도

로컬 랩(Local Lab) 3단계



문제 정의



융합적 솔루션 설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을 혁신한다

유창복 (성공회대 사회정책경제대학원)

[요약]

○ 서울시 7년의 혁신, 주체의 등장과 연결

- 주민 '3인 이상'이 벌이는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작당'이라는, 주민초대를 위한 일종의 '넛지(nudge)전략'으로 7년 동안 15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했고, 주민모임 5천여 개가 만들어졌다.

○ 권한의 민주화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를 핵심슬로건으로 하며, 정책의 목표는 권한의 민주화이다.
-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민주성 확보방안으로는 인구구성비 쿼터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 마을 밖 직장인들을 위한 '마을참여 유급휴가제'의 제도적 도입 방안 및 '마을참여 수당제' 방안 검토를 제안한다.

○ 권한의 실질화

- 주민자치회가 '정책결정권'과 결정된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
- 개인에게 시급한 문제를 이웃과 협력해서 해결하는 것이 마을협동의 원리이다. 차이와 공존하면서 마침내 합의에 도달해야만 협력적 행동이 시도된다. 이는 주민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 문제해결력, 융합의 세력화

- 지역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설득력을 갖게 되고 확장력이 생기며 혁신의 '주류화'가 가능해진다.
- 문제 해결력의 핵심은 '융합'에 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투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뛰어든 때 융합적 공론장이 만들어지며 융합적 협력이 시작된다. 즉, 융합은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생산-재생산의 로컬 생태계

- 마을공동체 정책의 목표는 주민들의 행복에 있다. 일시적인 성공사례를 넘어서 '커뮤니티에 기반한 생산-재생산의 로컬 생태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융합적 혁신의 실천모델을 위하여

- 대부분의 자치단체 혁신정책의 주요한 수단은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위탁제인데 현장으로부터의 신뢰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제 혁신을 혁신할 시점이다.
- 지난 7년간 서울시 혁신정책의 성과가 '주체의 등장과 성장, 다양한 혁신의 시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혁신의 과제는 '커뮤니티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로컬형 복지-일자리' 모델의 구현이다.
-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의 칸막이를 뛰어넘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자원이 융합하는 새로운 협력적 실천모델이 나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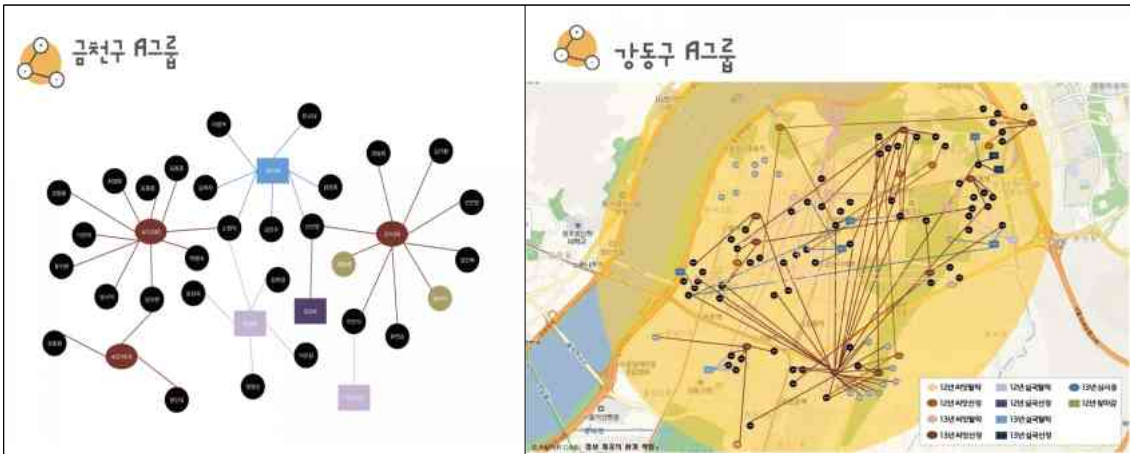
1. 서울시 7년의 혁신, 주체의 등장과 연결

7년 전,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추진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행정의 협력, 중간지원조직의 헌신에 박원순 시장의 과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의지가 더해져 꽤 큰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다.

정책으로 마을을 복원하는(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도 국가 규모의 천만 대도시에서 행정이 나설 때 오히려 부작용만 두드러지고 잘 되던 마을도 번거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려가 컸다. 무엇보다 일반 주민의 등장과 참여가 관건이었다. 마을을 형성하려면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가능한 일이나, 정착 그들은 살기 바쁘기 때문이다. 동네일에 관심 두고 이웃들과 뭔가 도모한다는 것이 도대체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주민 ‘3인 이상’이 벌이는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작당’이라는, 주민 초대를 위한 일종의 ‘넛지(nudge)전략’을 썼다. 그 결과 지난 7년 동안 15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했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주민모임 5천여 개가 만들어졌다. 나아가 이들 5천여 개의 [주민모임]이 동네 ‘오지라퍼’(오지랖이 넓은 사람. 남의 일에 자주 상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활약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작은 ‘근린’(동네, neighborhood) 단위의 [마을모임]을 형성했다.¹⁾ 서울시가 ‘3인 이상’의 [점]을 찍는 지원을 했다면, 주민들은 스스로 [선]으로 연결하며, 어느덧 네트워크 [면]을 형성한 것이다. 본격적인 면 전략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1] 점-선-면 주민모임과 마을모임의 형성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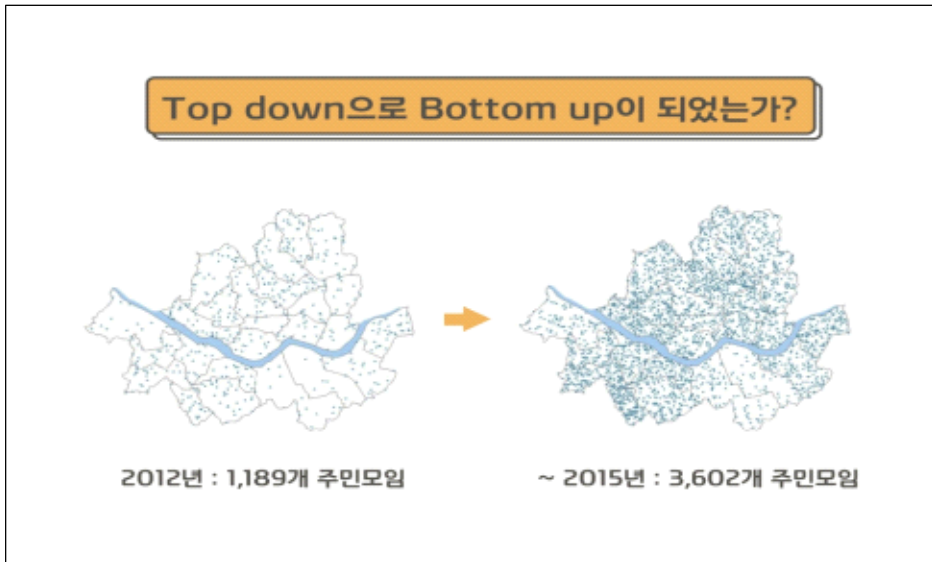
서울 전역에 형성된 크고 작은 근린 단위의 마을모임은 민선 6기(2014~2018)에 들어서면서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의 <마을계획단>사업의 토대가 되어주었고, 동 단위 주민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마을총회는 동(洞) 단위의 공론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마을의 리더가 탄생했다.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니라, 동네의 평범한 주민들 중에서 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리더가 등장했다. 또한 참여한 주민들은 좀 더 민주적인 ‘주민공론장’

1) ‘주민모임’이란 3인 이상의 친밀한 이웃들 간의 모임을 의미하고, ‘마을모임’은 주민모임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나아가 공통의 의제를 공유하는 좀 더 확대된 주민들의 근린 네트워크(neighborhood network)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2) 서로 의제도 다르고 실제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주민모임들이 ‘오지라퍼’를 매개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더욱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입력하여 지도에 올려보니 대부분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5분 동네’의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주민 연결망의 모습이었다.

의 필요를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정한 주민대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앞으로 민선 7기 4동안 424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주민대표체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담대한 꿈을 꾸다.

[그림2] 주민모임 형성의 서울분포도³⁾



2. 권한의 민주화

이른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명실상부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를 서울 구석구석에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권한 없는 참여는 들러리요 동원에 불과하다’는, 민관협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랜 불신이 있어왔다. 따라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를 핵심 슬로건으로 걸고, 결정의 권한을 관(官)에서 민(民)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나아가 생활세계의 현장인 동(洞)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동에서도 소수의 주민이 차지해온 권한을 다수의 주민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즉,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의 목표는 ‘권한의 민주화’다.

대표성과 민주성

물론 넘어서야 할 장벽도 만만치는 않다. 주민자치회가 ‘대표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것 역시 대표성과 민주성이다. 소수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선정위원회가 있지만 동장의 ‘낙점’으로 자치위원이 선정되다시피 해온 것이다.

우선, 동 주민의 인구 구성비에 따른 성별/연령별 쿼터제를 지켜서 ‘비례성’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15세 이상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임 방식도 ‘추첨제’를 적용함으로써 직접민주제적 장점을 도입하는 것 역시 주목할 점이다. 자치회 위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도 좋지만 선출에 따른 행정비용의 문제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희망자 중에서 인구 구성비 쿼터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이다.

3) 2017년 말 기준으로는 주민모임이 5,200여개로 집계된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문제가 있다. ‘접근성’의 문제다. 인구비례-추첨제가 동 주민 모두가 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선발 방식으로서 민주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절차상의 장치이지만, 형편상 참여가 불가능한 주민들이 있다. 즉, 실질적인 민주성을 확보하려면 형편이 안 되거나 처지가 어려운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의 상당수는 마을 바깥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일과 중에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마을 밖 직장인들을 위한 ‘마을참여 유급휴가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바쁜 일상으로 참여가 여의치 않은 주민들을 위한 유연한 회의시간대 조정, 온라인 및 SNS 참여 방안들이 적극 고안되어야 한다. 특히 중고등 학생들이 마을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마을참여 수당제

끝으로 ‘마을참여 수당제’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마을일에 참여한 주민에게 소정의 물질적·금전적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은, 주민들의 마을참여는 자발적인 봉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살기 바쁘다. 이웃들과 동네일을 의논하고, 나아가 품을 내서 함께 참여하기란 보통 주민의 경우 버거운 일이다. 더욱이 가부장 1인의 돈벌이만으로 다른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보장된다는, ‘가족임금제’를 전제로 한 봉사의 프레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마당에, 마을참여를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공적 활동으로 적극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형편이 좀 되는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대다수 나머지 주민들은 구조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당장 본격적인 실시가 어려울 수 있다. 법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기존의 봉사 중심 관행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자원봉사 영역⁴⁾의 가치와 철학과의 조율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 액수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시장과 자영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생의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것도 시도해볼만하다.

3. 권한의 실질화

주민자치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대표성을 획득하더라도, 권한이 없으면 종이호랑이다. 즉,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결정권’과 결정된 정책에 응당 예산이 따라 붙도록 하는 ‘예산편성권’도 가져야 한다. 즉, ‘권한의 실질화’다. 권한의 민주화는 반드시 권한의 실질화와 병행해야만 비로소 민주주의에 닿는다.

정책결정권과 예산편성권

그동안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500억), 협치예산제(100억), 시민참여예산제(700억)⁵⁾ 등 주민(시민)이 직접 정책을 발의하고, 일정한 심사와 투표 절차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28조 예산규모에 비하면 0.2~0.3% 정도에 그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방식도 아직은 공모제 방식을 약간 변형하거나, 정책내용에 대한 숙의가 누락된 인기투표식 투표제도로 결정되고 있어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4) 서울시는 물론 25개 자치구별로 자원봉사센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연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도 60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5) 2016년 과도적으로 100억의 협치예산제를 실시하였고, 2017년부터는 500억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를 700억으로 증액하고, 이름을 시민참여예산제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서울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자치회가 결정하도록 하며, 서울시 예산 5%를 시민이 결정하게 하는 획기적인 공약을 내걸고, 현재 정책으로 앉히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지난 7년간 실험했던 시민참여-협치예산제보다는 획기적인 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적 공론장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리고, 주민을 제대로 대표하도록 주민자치회 권한의 민주화와 실질화를 추진한다면, 역으로 주민(시민)이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의 부담이 따른다. ‘공론장’이다.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이웃들’의 필요로 해석해내고, 나아가 ‘동네’의 필요로 전환해내는 공개적인 소통의 장으로서 공론장을 만들어 운영할 책임이 있다. 사실 개인에게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를, 함께 공감하는 이웃들과 협력해서 해결하는 것이 마을협동의 원리다. 그래야 자기(개인)의 문제가 해결된다. 더욱이 더 많은 이웃, 즉 동네의 필요라는 더 큰 공적 의제로 되면, 그 해결의 수준도 높아진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형편과 처지의 차이에 따른 불협화음을 동반한다. 따라서 차이와 공존하면서 마침내 합의에 도달해내야만 비로소 협력적 행동이 시도된다. 이 과정은 다른 아닌 ‘시민성’이 발현되고, 주민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자유롭고 열린 공론장을 열고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달성했다면, 그로써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 즉 정책결정의 권한과 예산편성의 권한이 주어져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적 공론장의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는 제도를 만든다고 바로 달성된다기보다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덧 도달해 있는 그런 과제다. 참으로 끈질기고도 치밀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훈련되고 공감과 소통의 능력이 성장하면서 달성되는 것이다. 세심하고 인내심 많은 퍼실리테이터(촉진자, 안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론장의 속의성

또한 민주적 공론으로 도출한 합의가 실질적인 효험을 가지려면, 현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해결력은 매우 다양한 욕구를 찾아내서 이해하고, 매우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치밀하게 융합해내는 ‘속의’가 관건이다. 그러므로 ‘공론장의 속의성’은 적절한 정보와 충분한 자원의 조달을 필요로 한다. 정보, 사람, 돈, 행정 등 여러 자원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직접 조달되어야 가능하다. (부서 칸막이의) 파편적이고 소량의 (공모제 보조금) 자원 지원은 오히려 문제를 파편화시키고 해결에서 멀어지게 한다.⁶⁾ 부서별 칸막이 아래, 각개약진으로 집행되는 공모제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우리사회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성’의 대중적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담대한 ‘정치 프로젝트’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6) 주민 공론장에서 공론을 벌일 때, 동원가능한 자원의 규모와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의 수준이 열려있지 않으면, 주어진 자원과 정보의 한계 내에서만 발상하게 되어 오히려 문제의 본질에 닿지 못하고 뻥한 민원성 제안이나 개별적 실행의 과제만을 제출하게 된다. 결국 문제해결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주민의 역량에 대한 불신의 근거가 되고 전문가주의로 되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

4. 문제해결력, 융합과 협력

그렇다면 이렇게 민주화되고 실질화된 권한으로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주민자치회가 주민 중심의 정책결정과 예산배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을 갖고 확장력이 생기며 혁신의 ‘주류화’가 가능해진다. 혁신정책에 무관심하거나 반대의 입장을 가졌던 주민(세력)들도 “아하 저 사람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동안 그렇게 설치 댔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능력을 가져야 한다. 결국, ‘실력’이 있어야 한다.

융합과 칸막이

문제해결력의 핵심은 ‘융합’이다. 대부분의 공공문제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심지어 원인이 무엇인지 딱 짚어내기조차 어렵다고 한다. 불확실성의 세계가 자연계만이 아니라, 사회현상에서도 적용된다. 사회의 어떤 특정 문제적 현상이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해결 역시 다양한 솔루션이 융합적으로 처방되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의 부서별 칸막이, 시민사회의 의제별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박원순 혁신 시정의 초기 전략이었던, 혁신의 주체를 등장시키고 연결하는 데에는, 부서별 칸막이도 중간지원조직의 칸막이도 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효과적인 지원시스템으로 그동안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다양한 솔루션이 융합하지 않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이 칸막이는 거꾸로 문제해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행정은 현재의 부서독립예산제 아래에서 융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100개가 넘는 과가 각기 분업적으로 움직이는 거대 조직이 칸막이를 허물고 자유롭게 횡단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⁷⁾ 그렇다고 민간은 가능할까? 안타깝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5년 전,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청년 등 주요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을 시도해 보았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통합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통합을 위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자치구 차원에서 통합적인 지원센터를 유도해 보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예산이 나오는 곳이 다르니, 융합적 예산집행도 융합적 정책집행도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는, “행정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공무원)도 그 자원을 전달하는 자(중간지원조직)도 칸막이를 허물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융합

그럼, 융합은 어떻게 가능할까? “융합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가진 자를 초대하면서 시작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든 활동가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든 공무원이든, 오로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투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들 때, 비로소 융합적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융합적 협력이 시작된다. 행정 자원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과 주체가 있는 곳, 바로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오로지 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자원이 모이고, 자원을 가진 주체들의 수평적 협력이 가능하다. 현장을 중심으로 주체와 자원이 협력적으로 재구성되고, 행정자원(보조금)의 전달체계 역시 문제해결의 장소인 현장의 조건과 요구에 따라 재편되어야 한다.

7) 그럼에도 민선 6기 들어 추진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일명 ‘찾동’) 정책은 행정국, 혁신국, 복지국, 여성가족실 등 서울시 국·실 단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광역과 기초, 동 단위에 이르는 일관 협력, 민과 관의 협력 등 매우 총체적인 융합적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혁신 시정 중 가장 대표적인 융합 행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5. 생산-재생산의 로컬 생태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일까? 지역에서 '복지와 일자리' 해법을 내는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망을 기초로 주민들에게 생활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동시에 지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정책의 목표는 당연 주민들의 행복이다. 특히 '없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인간답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이다. 복지의 목표가 바로 이것 아닌가. 소득 없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특히 도시에서)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니 점점 줄어든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체제 아래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어,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혁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다양한 혁신의 미담, 혁신의 실험적인 시도, 초보적 단계의 혁신 성공사례들은 많이 나왔다. 이제는 지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지역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일시적인 실험적 성공사례를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의 단계로까지 진화되어야 한다. 이른바 '커뮤니티에 기반한 생산-재생산의 로컬 생태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이 마련된다.

관계 기반형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

그렇다면 지역 차원에서 가능하면서도 산업 차원으로까지 진화 가능한 영역이 무엇일까? 돌봄과 재생에너지이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하며, 심지어 비교우위까지 가지는 산업 영역이 바로, 친밀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 산업과 생산-소비의 로컬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이다. 보건과 의료, 보육과 교육, 문화와 로컬푸드 등의 관계-돌봄 영역에서 로컬형 생산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돌봄서비스를 제공-전달-관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지역에서 새로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호혜적인 신뢰관계망에 기초한 지역복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 가는 지름길로 접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와 자산화

한편 태양광 패널의 설치와 관리는 적지 않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와 충전-배전설비는 '지역자산화'로 연결된다. 이미 개인이나 공공의 소유로 되어있는 자산을 커뮤니티의 자산으로 돌리는 일은 무척 어렵다. 하지만 새로이 설립될 자산을 '선점'하여 지역자산화(마을에너지협동조합)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로컬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6. 융합적 혁신의 실천모델을 위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혁신정책의 주요한 수단은 중간지원조직이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허브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가 그것이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청년의 경우 박원순 시장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추진된 1기 센터들이다. 이들 1기 센터는 비교적 정책적 자율성을 누린 편이다. 행정이 경험이 없으니 민간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민간의 자율적 정책형성 기능을 상당한 수준으로 '허용'한 탓이다. 하지만 2~3년이 지나면서 행정은 빠른 속도로 학습을 완료(?)하고, 센터에 개입한다.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개입하기 시작하여, 아예 정책 형성의 주도성까지를 넘나들며 개입의 수준을 높인다.

혁신의 도구, 중간지원조직의 명암

한편 현장은 주민들의 등장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주도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나아가 의제(영역) 간 접촉과 연결이 빈번해지면서 때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협력에 대한 공감은 커지고 실제 협력의 필요성도 높아진다. 즉, 행정의 관리 강화와 현장의 융합적 주도성의 강화가 서로 충돌한다. 이른바 공모제 피로도, 협치 피로도 등으로 표현되는 갈등적 상황이 일반화된다.

한편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가들은 행정으로부터의 '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 행정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한 것이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지위가 대부분 민간위탁제에 근거한 수탁자인데, 민간위탁제는 행정이 민간에게 일종의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철저히 '을'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다. 혈세를 집행하는 일이나 당연하지만,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자율적 창의를 초대하는 혁신 정책에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방식이다.

반대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현장으로부터의 신뢰도 줄어들고 있다. "센터도 갑질하나? 공무원 다됐다." 혁신정책의 초기단계에 혁신의 필요성을 알리고, 소소한 실천을 독려하면서 주체를 등장시키는 데에는 중간지원조직이 큰 역할을 했지만⁸⁾, 이제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종류도 대폭 늘어나서, 그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의 비중이 더욱 더 커진다. 행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역할이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장에 더욱 방점을 두고 현장의 움직임에 아주 민감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을 혁신할 타이밍이다.**

현장융합형-공론형 보조금 정책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보조금 집행의 방식이다. 이른바 '공모제'다. 공모제는 철저히 부서별로 기획되고 집행된다. 보조금이 전달되는 방식이 철저히 칸막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부서관막이형/공모형> 보조금 집행방식에서 <현장융합형/공론형>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현장에서 문제해결의 해법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민주적 공론장에서 깊이 있는 숙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보조금은 바로 현장의 민주적 공론장에서 결정된,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적 협력체계와 정책에 '직접'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공론을 통한 융합적 협력이 작동되는 곳(현장)에 보조금이 연결되어야, 문제해결력(이른바 '성과')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민주주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박원순 시장이 민선7기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시예산 5%의 시민결정제가 서울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1조에 달하는 5% 예산을 2~5%로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전담하는 기구로 합의제 행정관청인 <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한다.** 민주주의위원회는 자문 권한만을 갖는 통상의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내 각 부서처럼 행정행위의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이면서, 서울시 행정체계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주도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다. 민주주의위원회는 서울시예산의 5%를 바로 <현장융합형/공론형> 방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는 생활세계인 마을과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장 기본

8) 7년 전 '정책으로 마을하자'고 나서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여 민간이 축적해온 풀뿌리활동의 경험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때 중간지원조직은 궁극적으로는 소멸이 불가피한 조직이라고 했었다. 아주 없앨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기능은 많이 바뀔 것이라 예상했었다. 물론 아직 주민의 등장은 여전히 부족하고, 자치구 차원의 지원활동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당장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혁신적 실천의 방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되는 주민대표 조직이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진화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공론장 운영과 숙의를 통하여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초대하고 자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듯 민주주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와 생활의 현장인 마을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기관인 셈이다. 무엇보다 부서칸막이를 뛰어넘고, 중간지원조직을 건너뛰어, 현장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자원이 직접 투입되도록 결정할 수 있는 두 축이다.

로컬형 사회연대경제

주민자치회가 동네의 문제를 발굴하고 자원투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주민대표체라면,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관리하거나 하는,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개인일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제일 수도 있으며, 복지기관 또는 NGO단체일 수도 있다. 이들은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효율적 실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경제 플랫폼을 거점으로 활약할 것이다. 물론 이 플랫폼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학교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도 합류한다. 이른바 ‘로컬형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관이 일방적으로 (위탁금이든 보조금이든) 자원을 주고, 민간은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일종의 갑을관계 같은 것이 아니라, 민이나 관이나 자신이 가진 자원을 내어놓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진화된’ 협치모델을 구현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기반의 ‘마을정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동네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투입여부와 투입량을 결정하는 결정기관이다. 또한 문제의 종류와 의제의 성격별로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영역별로 깊이 있는 숙의와 의사결정을 한다. 한편 동네에는 사회연대경제⁹⁾ 플랫폼이 있어서, 여기서 문제(복지와 교육, 먹거리와 안전, 환경과 에너지 등등)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개인, NGO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복지기관, 행정 등)들이 교류하고 협업을 한다.

이렇듯 주민자치 영역은 공론을 통한 [의사결정체]와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체]로 크게 구분되고, [의사결정체]는 영역별 분과위원회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구성된다. [사회연대경제체]는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을 거점으로 다양한 사업주체들(개인, 기업, 단체, 행정)이 교류 협업을 하게 된다. 동을 기본단위로 삼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자치 및 사회연대경제의 구조가 ‘마을정부’의 기본토대를 구성한다.

9) 마을공동체가 충분히 경제화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커뮤니티 기반이 탄실하지 못한 단계에서, 양자는 서로 별개인 것처럼 대립한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 역시 별개의 부서로 칸막이가 쳐져있으니 이러한 분리 현상은 더욱 강화된다. 사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동전의 양면임에도, 양자 모두 미숙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분리-대립 현상이다. 앞으로는 양자가 통합된 높은 수준의 로컬 생태계를 향해야 하는 바, 도달해야할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사회연대경제’라는 말을 쓴다.

[그림3] 마을정부의 기초, 의사결정체와 사회연대경제체



동(洞) 주민자치회의 상위에는 자치구 단위에서 다양한 민간 사회·경제단체들로 구성된 포괄적 네트워크인 [시민협력플랫폼]이 있고, 광역단위에서는 가칭 [서울시민커뮤니티진흥원](SCA)¹⁰⁾을 상정할 수 있다. SCA는 일종의 서울시 출연재단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행정의 전달체계는 전통적인 하향위계적 계통인 [서울시 행정국] ▶ [자치구청] ▶ [동 주민센터] 계통을 따라 작동한다.

[그림4] 마을정부의 거버넌스



마을정부란 [동 주민자치회]-[동 사회연대경제체]를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양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자치구 협치회의]-[자치구 시민협력플랫폼]을 포괄하는 기초정부를 의미한다.

"Local Lab, Local Change" (LL-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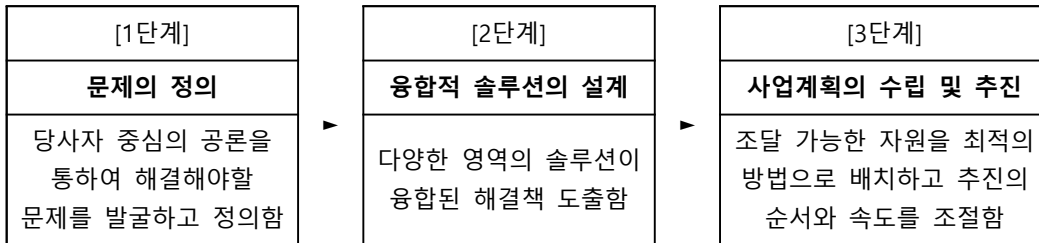
지난 7년 혁신정책의 성과가 ‘주체의 등장과 성장, 다양한 혁신의 시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혁신의 과제는 ‘커뮤니티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로컬형 ‘복지-일자리’ 모델의 구현’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행정주도형 간막이를 뛰어넘는 현장 중심의 융합적 실천모델이 나와야 한다. 민-관의 대립적 구도에 기초한, 보조금을 매개로 하는 갑을관계를 과감히 폐기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자원이 융합되는 새로운 협치 모형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른바 리빙랩(Living Lab)¹¹⁾을 통한 민관협력의 혁신모델을 시도해본다. 동 단위의 근린 수준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로컬랩(Local Lab)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로컬랩은 크게 세 단계의 프로

10) SCA는 현재 <사회적우정청> 또는 <사회적우정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실현 여부는 미확정이다.
 11) “물리적 공간, 또는 가상현실, 또는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사용자 그밖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공-민간-시민의 파트너십을 맺어 실제 생활현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과 시스템의 창조, 프로토타입의 개발, 실증, 테스트 등을 수행함.”(2015, Schuurman)

세스로 진행된다. 1단계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기술-정의하고, 2단계는 기술-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적인 솔루션을 설계하며, 마지막 3단계는 실행을 위한 자원조달과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5] 로컬랩 추진 프로세스



7. 맺음말

7년 전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라고 했다. 주변에서는 시민운동가 출신이니 시민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정을 이끌어가려나 했다. 아니다, 그는 보통의 서울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정을 이끌고 싶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시민은 살기 바쁘다. 사는데 허덕여서 시정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 정책에 대한 정보도 접근하기 쉽지 않고 생소하다. 게다가 공무원들과 함께 협력해본 경험은 더더욱 없다. 아니 있어도 좋지 않은 기억뿐이다. 사실 공무원과 시민은 통역이 필요한 사이 아닌가.

그래서 박시장은 ‘넛지’(Nudge) 전략을 사용한다. 거창하게 서울시정을 함께 하지도 하는 대신, “이웃들과 소소하게 인사하고 만나서, 수다 떨듯이 일상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해보시라” 권했다. 그러자 15만여 시민이 참여했고,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5천여 개가 등장했다. 또한 등장한 주민모임들은 ‘오지라퍼’를 통해서 골목에서 동네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 지금도 서울은 연결되고 있다.

박 시장은 다시 전략을 업그레이드 한다. “참여에서 권한이다” 이들 등장한 주민모임에 ‘권한’을 부여한다. 권한 없는 참여는 동원이 되기 때문이다. 동마다 주민들이 모여 6개월여 동안 토론을 벌여 <마을계획>을 세우고 <마을총회>를 통해 마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민이 공론을 통해 결정한 사항은 정책이 되도록 했다. 나아가 권한의 핵심은 예산이기에 예산이 직접 편성되도록 했다. 동 단위 주민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마을총회는 참여한 주민들에게 좀 더 민주적인 ‘주민공론장’의 필요를 더욱 절감하게 하였다.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의 혁신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고, 민선 7기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설득력을 갖고, 설득이 되어야 확장되고 지속가능하다. 다수의 주민들은 혁신의 가치 이전에 이해관계로 설득된다. 생활의 필요를 한 치라도 개선하고 나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동의가 된다. 혁신의 가치에 동의하고 박원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혁신에 관심 없고, 박원순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도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 현대의 공공문제들은 대부분 원인이 복잡하고,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도 어려운 불확실성의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다양한 해법이 융합되고 다양한 자원이 협력을 해야 비로소 해결된다. ‘융합과 협력’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이제는 현장이다.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문제

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원과 주체를 초대할 때 비로소 융합과 협력은 시작된다. 행정은 이제 보조금 지원방식을 바꿔야한다.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천모델이 나와야한다.

7년의 혁신정책, 박시장의 일관되고 똑심 있는 정책의지, 많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무엇보다 서울시민들의 헌신적인 참여 덕분에, 서울은 이제 세계적인 혁신의 성공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위기이다. 문제를 해결해내는 '실력'을 보이지 않으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시민으로부터 다시 얻은 4년,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보여야 한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끝] (2018.11.4)

발표 3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구상 제안

이유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간사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구상 제안 (2019년~2022년)

이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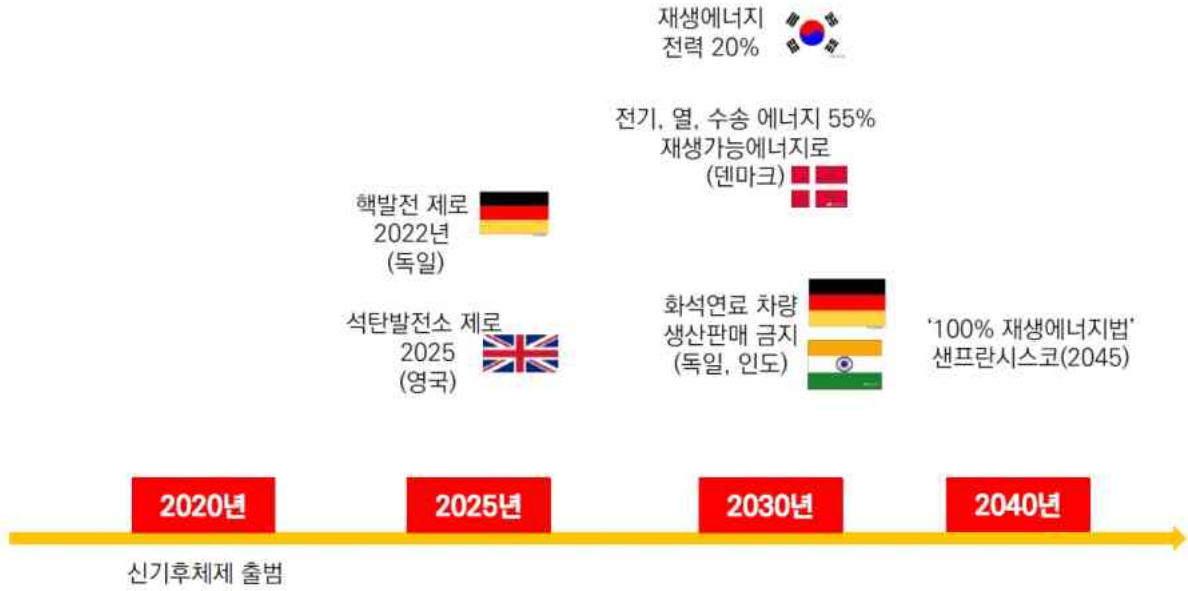
leeyujin2010@gmail.com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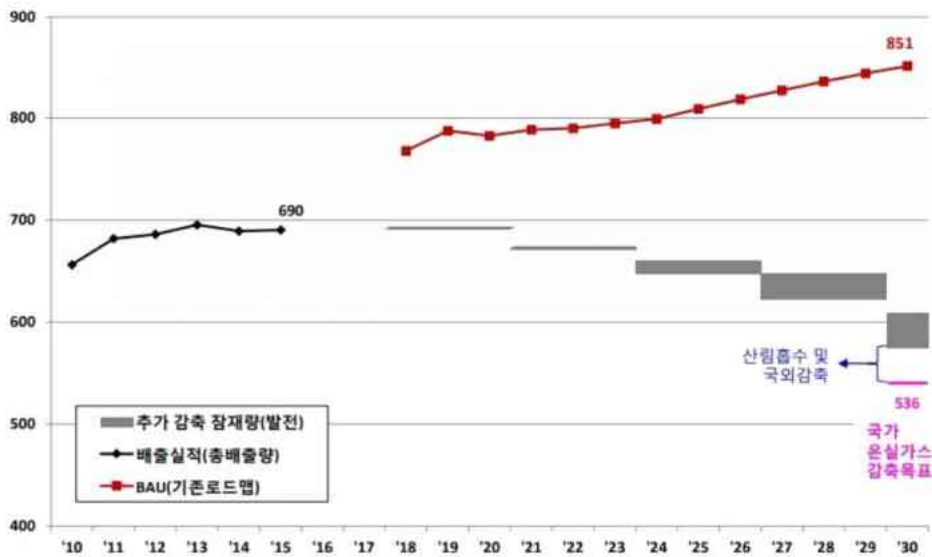
에너지자립마을 7년 소회

- 2012년 첫 마을부터 2018년 100개의 마을들
-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발표에서 2017년 정부 탈핵에너지전환 선언
- 에너지자립마을들의 잠 못 이루는 밤, 기쁨, 환대, 자긍심, 경쟁, 섭섭함의 날들
- 7년을 시달려 온 <정량적 성과에 대한 압박>
- 전국으로 확산되는 에너지자립마을
- 폭염, 한파, 2020년 파리협정 시작
- 에너지자립마을 2.0

2020년 1월 1일, 뉴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기후 체제 - 한국 2030년 5억3천6백만톤



※ 비고: 경로내 범위로 표시된 부분은 전환부문 추가 감축잠재량을 고려한 값임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 2030로드맵 수정안

서울시 주요 에너지전환 계획

원전하나 줄이기

- 2020년 전력자립률 20% 달성
- 원전 2기 분량 에너지 줄였음

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

- 2022년 2005년 대비 25%감축
- 2015년 45,646천 톤(8%감축)
→ 2020년 37,110천 톤 (25%)



태양의 도시

- 설비용량 1GW(2022년)
- 태양광 100만 가구(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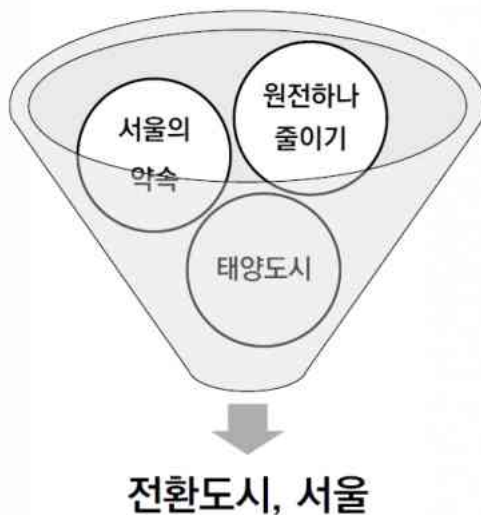


5차 지역 에너지계획

- 2040년까지 서울의 에너지계획
- 어떻게 에너지시민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극대화할 것인가

5

전환도시 서울 - 5차 지역에너지계획



전환도시 서울에서 사는 시민의 삶

“기후변화를 인식하는 시민,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소비 환경영향 인식,
소비자로서만 아니라 생산에 참여
(에너지, 물, 먹을거리, 자원),
전환문화를 인식하고 전환의 삶을 살아감,
위기에 대한 회복력에 대한 개념 있음,
재난 시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알고 있음”

- 서울의 약속,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 전환도시 서울
(기후변화 + 미세먼지 + 에너지전환)
※ 에너지만이 아니라 푸른도시, 자원순환도시, 물순환도시와도 연계
※ 서울시의 장기계획을 전환도시에 맞춰 조정하고 융합하는 방식

에너지자립마을이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방향

-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과 리더들의 열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역량강화)
-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일자리, 활동기반)
- 에너지 효율이나 생산 기술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실험
- 에너지전환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
- 2020년 파리협정을 앞두고 에너지공동체의 방향 제시, 전국의 에너지 자립마을들과 연결 - 마을의 변화가 서울의 변화를, 서울의 변화가 전국의 변화를!
- 에너지자립마을 10년을 기록하고, 발전방향을 찾는 방안
- 보다 주체적이면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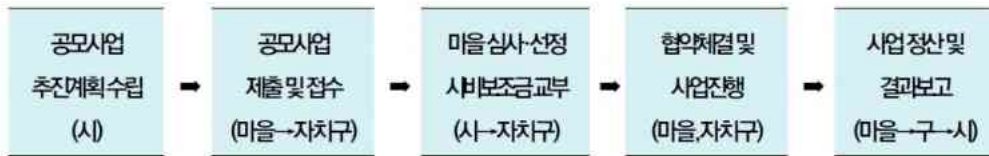
에너지자립마을 2단계 비전과 목표

비전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의 해법을 찾아 실천하는 에너지시민들의 공동체, 에너지자립마을	
지향 방향	사업 내용
•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과 리더들의 열정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역량강화)	➔ 에너지자립마을 2.0
• 에너지 효율이나 생산 기술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실험	➔ 에너지자립 특화지구 에너지자립마을 리빙랩
•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일자리, 활동기반)	➔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센터

8

에너지자립마을 2.0 공모(안)

- 마을+자치구+지원단체 공동 운영방식, 마을당 50백만원/年
- 지원기간(3년) 및 사업내용
 - (1년 차) 주민참여형 동 단위 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 (2년 차)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포럼 및 워크숍 개최, 효율화 사업 추진
 - (3년 차) 에너지 생산, 에너지 신산업 분야 집중 지원
- 성과지표 : 마을별 에너지절감 15% 달성 목표(2018년 기준), 2019년 5개소 구상
- 신청자격 : 지역주민 10인 이상 공동체 활동경력이 있는 주민모임과 지원단체
 지원단체 :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기반(활동경험자)을 보유한 단체(업체 등)
 ※ 지원단체 요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비영리단체 및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 등



9

에너지자립마을 특화지구 : 순환경제 모델



- 순환경제 모델 (에너지, 물, 폐기물)
 - 에너지자립마을 공간에서 에너지 절약, 생산, 효율화, 신산업, 재활용, 새활용, 물순환 등을 통합적으로 시도하는 것

10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전환 기술 리빙랩



□ 전환의 기술을 마을에서 실험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기위한 리빙랩 실험

- 리빙랩(Living Lab)은 생활공간 자체가 실험실 혹은 연구실이라는 의미로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집단, 정책가, 적정 기술자, 마을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풀어내는 것을 의미
- 에너지자립마을 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에너지자립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실증사업 추진하여 해결방안 도출 및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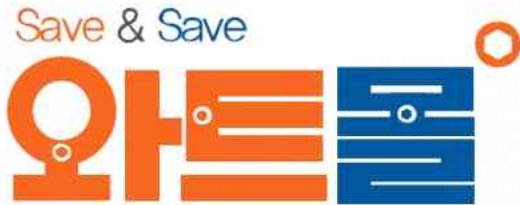
11

에너지자립마을 특화지구와 리빙랩 프로젝트 비교

구분	서울시 에너지자립 특화지구	에너지자립마을 리빙랩 프로젝트
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제1항 (행정 및 세제, 재정상의 조치)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제2항 (행정 및 세제, 재정상의 조치)
사업목적	대도시에서 실질적인 에너지자립을 향상 및 친환경생태마을 모델 창출	마을공동체의 자발적인 활동 및 실증 연구로 에너지 자립률 증대 기여
지원기간	3년	3년
조성목표	2022년까지 4개소 지정 (19년~22년까지1개소씩지정)	2022년까지 10개 선정 (1개(19년)•2개(20년)•3개(21년)•4개(22년))
신청자격	기존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1개 행정동, 50가구 참여 동의	마을, 자치구, 연구소, 학교, 기관, 단체 등 컨소시엄 구성
사업비	특화지구당 3년간 3억원 지원	프로젝트당 3년간 1억원 지원
선정방법	자치구 공모	자치구 공모
사업내용	맞춤형 에너지절감 로드맵 제시 에너지효율화, 생산 지원 확대 에너지신산업 등 융·복합사업 추진 에너지자립마을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에너지자립을 위한 마을별 맞춤형 과제 발굴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성 후 지역밀착형 문제해결방안 모색

12

에너지자립마을의 지속가능성 지속적인 모색 (일자리)



2018년 협치사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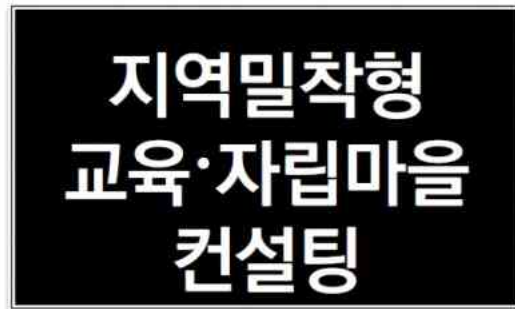
아민전기로 수요자원거래시장(중소형DR) 참여
분리: 현대부엌미



DR 또는 전력중개사업



태양광 주민자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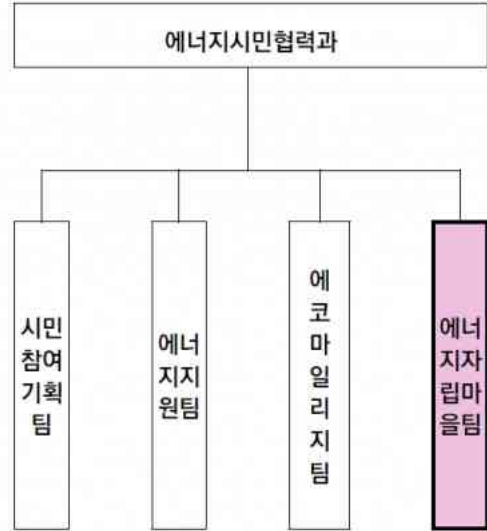
2019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 지역에너지전환 약속 후보 강서, 양천, 서대문, 성동, 중랑구청장
-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19년부터 8월에 개최되는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청정분권부문을 신설해 지역에너지 전환 우수 사례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 시상은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가장 권위 있는 경진대회이다.
-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는 오는 9월까지 17개 광역지자체장의 에너지정책을 종합 분석한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는 민선 7기 당선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실천워크숍 및 교육, 실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지역에너지전환 정책 확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다.

에너지자립마을 인프라 구축 (1) 팀신설

○ 에너지지원팀 내 에너지자립마을 업무를 분리하여 에너지자립마을팀 신설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 운영
-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컨설팅 운영
- 에너지자립마을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 에너지자립마을 신산업 및 현안 사업 추진
- 에너지자립마을 운영협의회 운영
- 에너지자립마을 1단계 2. 3년차 공모, 2단계 신규마을 공모 운영
- 에너지자립특화지구, 에너지자립마을 리빙랩 사업 공모 운영
- 에너지자립마을 인증제 운영
-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등



15

에너지자립마을 인프라 구축 (2) 지원센터 마련



○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센터는 도심권에 설립하고, 4개 권역별로 담당인력(2~3인)을 배치하여 마을 별 지역특화형 신규사업 발굴, 지원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 담당

-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2019년 연구용역 실시)
 - 100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이후, 에너지자립마을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필요
 -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센터 설립은) 법적 근거 마련(조례개정) ⇒ 타당성 조사 ⇒ 설치, 운영계획 수립 ⇒ 적합한 운영형태 결정 ⇒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의 절차 필요

(1안)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6조(시민등과 협력강화) 조항 개정 ※ 담당부서 : 녹색에너지과

(2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단서 조항 추가 ※ 담당부서 : 마을공동체담당관

16

에너지자립마을 인프라 구축 (3) 에너지자립마을 전국대회

- 민선 7기 지자체의 가장 활발한 에너지관련 사업 에너지자립마을 (227개 시군구)
- 2019년은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1년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이 지난 7년의 경험을 토대로 신기후체제시대에 마을과 시민들이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전국대회 개최, 전국의 경험과 비전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마련
- 2022년 에너지자립마을 10년을 정량+정성적이 성과로 정리하는 작업 시작
-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필요성이 공유되어야 가능한 사업

17

에너지자립마을 2.0을 위한 역할 분담



18

전환도시 서울을 만드는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와 새로운 도전 정신”

지정토론

임정빈
동작신협 이사장

에너지자립마을과 신탁의 사회적 역할

동작신탁 임정빈 이사장

□ 신탁은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금융협동조합

- 신탁법 제1조 목적 :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기여
- 신탁법 제39조 사업의 종류 : 신용사업·복지사업·공제사업,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등
- 신탁법 시행령 제16조 복지사업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문화후생사업·지역사회개발사업
- 신탁의 본질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닌 조합원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금융협동조합

□ 동작신탁의 사회적금융

- 사회적금융이란 예금, 대출, 투자, 기부금을 포함한 기타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의 수단을 통해 사람, 환경,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금융을 뜻함 (olaf weber & sven rember)
- 동작신탁은 서울의 선도적인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발굴하고 지원해 왔음.
- 2018.3분기말 기준 현재까지 113개 기업에 약 90억원의 (저리·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함
- 주요 지원 분야는 보육,돌봄,의료 등 사회서비스분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협동조합, 친환경먹거리생협,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사회 미치는 공익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낮은 분야

□ 기화변화에 대한 대응과 신탁의 역할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은 지역단위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을 추구하는 모델
- 세계적으로 사회적금융의 상당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녹색금융 영역임. 그간 국내에서도 산업은행 등 녹색금융에 대한 사례는 일부 존재했음. 다만 에너지자립마을이 추구하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단위 에너지자립에 대한 금융적 고려는 미약했음

- 동작신협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간 지역주민 주도형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등을 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자함. 이는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함.

□ 주민주도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금융모델

- 서울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연계한 지역단위 시민발전소 4곳에 시설자금 지원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 소진 이후를 예비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시범사업 추진

1. 지역단위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자금지원

- 서울시 기후변화 기금 제외하면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대상 자금지원 하는 유일한 민간금융

- 공공기관 옥상·주차장 등 공공부지 임차형 햇빛발전소가 다수인 서울 특성에 걸맞는 국내 유일 맞춤형 쓸라론 상품 개발 (공공부지 임차권 담보로 최장 20년까지 햇빛발전소 시설자금 융자 가능)

2. 미니태양광 확산을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 프로그램 ‘우리집쓸라론’ 출시

- 보조금 의존적인 미니태양광 보급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시범사업 실시

-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 연구소 - 적정기술업체 - 동작신협 연계한 리빙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품개발

- 동작신협 기금 500만원 조성으로 1차년도 사업 실시

- 미니태양광 자부담금 약20만원을 동작신협에서 선지원하고, 설치가구는 전기요금 절감된 금액만큼(월1만원씩) 상환함.

- 2017년 4~5월 2달간 27명 이용

3. ‘2018 우리집쓸라론’

- 올 4분기 출시 예정

- 베란다형에 비해 부진한 주택옥상형 미니태양광(1~3kW) 보급 활성화 목표

- 건당 최대 백만원까지 지원한도 상향

- 소규모 가정형 <-> 지역주도 (협동조합)사업자형을 아우르는 에너지전환 금융플랫폼

지정토론

오회옥
금하에너지자립마을 대표

주제 :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에너지 전환으로의 금하마을 에너지 센터 이야기

발제자 : 에너지자립마을 2년차 금하마을 대표 오회옥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장 작은 금천구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금하마을은 900세대 주민 2,000명으로 구성됩니다. 金河마을은 4계절이 뚜렷하고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갈고 닦고 노력하는 마을입니다. 금하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닦고 가꾸어 반짝반짝 빛나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땀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2년차인 금하는 지난 11월 02일 저탄소국민실천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기준이 정성적인 가치보다는 정량적인 데이터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여 금하의 많은 사업과 노력에 비해 최우수상이 아닌 장려상에 그치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층 주거지가 대부분인 금하마을은 아파트와 저층주거지를 같은 수준으로 심사를 했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저층 주거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속에 에너지 전환으로의 금하마을 에너지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 이를 알리는 데 힘써왔는데, 운 좋게도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노원 EG센터, 드림센터 홍보관, 중랑구 에너지 플라자를 혼합형으로 서남부를 대신할 에너지 센터를 2019년 3월에 제일 먼저 건립할 계획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 대한 고민으로 여기까지 오기도 매우 힘들었지만, 뉴딜 사업에 선정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길이 보일 줄 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무거운 짐 보따리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체가 순수한 주민이기 때문에 인건비, 유지보수 관리비 운영은 주민의 몫이 되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주민은 현장에서 느끼는 경험으로 현장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에너지센터를) 설계할 때 시간에 쫓겨 급하게 고민하면 때는 늦을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한 홍보관을 넘어서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설계 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은 주택청소, 주차장, 커피숍 등으로 겨우 운영이나 하는 범위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고 상상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기다리면서 2~3년 준비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민을 교육시키고 에너지전환의 법체계 방식으로 C,R,C를 설계해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사업에 참여해 먹는 주체가 일부 사업자나 자영업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밥그릇 뺏힙니다. 난다 긴다 하는 자영업자들 뺏힙니다.) C,R,C가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버전의 상상을 하면서 투자처를 모으고 세대별로 모아서 탄소배출 절약 가능하게 80%쓰고 20% 감축률을 팔고 절약 대가를 받아가며 수요관리를 해주면서 태양광 생산을 옆집에 팔고 중계거래소 방식의 사업에 대한 콘텐츠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아이디어 네트워크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 속에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2단계 **2.0 버전업** 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모두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파격적 도시재생으로 연계해서 금하의 에너지 권한을 위한 자문단을 서울시가 셋팅하고 조직해서 들어와서 그 판 위에서 경기를 해주는 고민을 행정이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에너지는 새로운 분야이다보니** 시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진행비가 없는 주민대표는 내 인건비 없이 막중한 책임만 주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온 전문 석 박사 포럼과 토론 바탕 위에서 금하로 오셔서 몸으로 뛰고 자문비 회의비 없어도 전문가들이 꾸는 꿈이 에너지 전환이기 때문에 판을 만들어 놓았으니 기회 왔을 때 꿈을 꾸던 것이 현실이 되게 해 보심이 어떨 런지요?

박시장님 자주하시는 말씀 함께 꾸는 꿈 현실이 된다고 하셨죠. 금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세미나실에서만 하지 말고 금하에 오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과 기술력을 협치 해 나가며 집행방식을 거버넌스로 그림 그려가며 많은 준비와 전력을 단체와 연대해서 단체가 투자하고 공간 활용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해야 합니다 마을 대표로서 에너지 센터를 유치해 놓고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기점을 만들기 위해서 순수한 주민이 앞장선 것입니다.

모든 전문성이 실험이 되고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금하가 만들어 놓은 구조를 잘 활용해서 점점 더 지역에서 규모가 커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집중 시켜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금천구 일대 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인구는 적지만 에너지 분권이 되면 한전이 독점하는 기형적인 시스템 국가 생산이 아니라 금하마을 주변으로 전력을 사고 파는 중계역할(EMS)을 C,R,C의 사업 모델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하 선샤인 주식회사”로 엄청난 대전환 발생을 이곳에서 출발해서 새롭게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처음 격은 일이지만 공부를 먼저 하신 분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포럼, 워크숍 수없이 많이들 해오셨으니 이제 부터는 근면 성실하게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사례를 보여주고 남겨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주민 주도형 전력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하고 중앙집중 독점 체계였던 것을 전국에 260개 자치구중 금천구 덩어리 덩어리 마다 관리해주는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한전이 무분별하게 깔리는 태양광과 풍력을 파악도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전기요금을 줬다 뺐다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젠 통제 불가능한 시대에서 각자 작은 규모로 문제와 교란,역송전이 생기지 않게 금천구가 블랙아웃 정전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에너지 관리해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권의 핵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경험이 없습니다.

금하에너지 전환 C,R,C가 성장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고 싶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한 마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노력과 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 마을에 있는 헌신적인 주민이 해내기를 바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땅만 파는 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협치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할수 없으니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다방면의 사람이 다방면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미나실에서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실력들을 금하에 오셔서 없으면 없는 데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옛날에는 한 가지만 단순하게 고민하면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럼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도구가 되어 다양한 지원의 계기와 도시재생 → 에너지 사회적 C,R,C 지역 경제 → 우리가 주는 에너지 전환의 상상이 이루어지도록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구조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슬이 서 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흩어져 있는 구슬을 금하에서 꿰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토론

이강오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

지정토론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

지정토론

정혜영
도시와삶 사무국장